

시론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최근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대만 문제와 반도체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돼 양 진영의 이념적 패권의 식과 국가주의적 사고에 집착하여 평화적 공존의 글로벌 외교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즉 패권의 탐욕으로 외교협상 없는 무질서의 세계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전세 사기 및 주가 조작과 루나, 테라 등 비트코인의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시장경제의 신뢰를 한순간에 훼손시키는 대형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공정한 기회가 사라지는 시장경제를 초래한다.

전세시장에서는 무자본의 갭 투자로 인한 강동주책의 경매, 월세 집을 전세로 계약하는 공인중개사의 사기, 세금 미납 및 임금 체불과 금융 기관의 약탈적 대출 등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의 우선변제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늦었지만 국회는 전 세사기 피해 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법 시행 후 연장하기로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세시장의 신뢰를 붕괴 시킨 사기 행각으로 인해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한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은 심각하다.

탐욕과 약탈의 시장경제

주식시장은 경쟁시장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어 가격기구에 의해 조정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한 증권기관의 감시와 감독, 그리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서킷 브레이크(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나 사이드카(선물 및 현물 매매 5분간 중단하는 조치), 그리고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 폐지 등 조직의 메커니즘인 직접 개입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유지시켜왔다. 이것은 자금의 원천인 주식시장의 신뢰가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 조작은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가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작전세력과 공모해 시세 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수법의 범죄이다. 주가 조작 수법도 사채업자 및 펀드매니저와의 공모로 시세 조작, 풋옵션 상품 투자로 시세 조종의 도미네이션 사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한 무자본 인수합병 등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들은 시장에 충실한 개미 투자자를 착취함으로써 심각한 손해를 끼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작전을 짜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권의 대량 매물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CFD(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차액만 현금을 결제하는 잔고 공시도 안 되고 만기도 없는 변동성 확대가 심한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번 사태에서 전문 투자자와 증권사들이 모호한 제도적 미비함을 이용하여 이익을 착취하여 투자자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장외 파생상품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자본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복잡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투명성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오

히려 금융기관과 규제기관 출신 로비스트에 의해서 규제당국이 포획(捕獲)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우리 사회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금융 권력과 약탈적 대출, 이에 편승한 부도덕한 연예인, 기업인, 상위 부유층, 금융자산 운용자와 브로커, 법조인과 회계사, 정치인, 그리고 사기꾼 등의 공모와 조작, 관료들의 잘못된 규제 인식과 제도 개선의 지연에 의해서 약탈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사는 전세 임차인, 선의의 투자자, 그리고 저소득계층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회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이용하는 일부 인간들의 탐욕으로 도덕적이고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의무와 절제된 시민의식이 무너져 간다. 이것은 우연적이며 일회성의 사건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린 인간의 탐욕으로 조작되거나 사기 행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끝나지 않은 추락(Freefall: America,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World Economy: 2010)'에서 '탐욕은 절제를 이긴다(Avarice Triumphs over Prudence)'라는 표현으로 시장경제의 탐욕적이고 약탈적인 행동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는 자본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고 자본주의의 성찰을 통해서 탐욕에서 벗어나 절제를 회복함으로써 평범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할 시기이다.

社說

의료 사각지대 전남 국립 의대 설립 공동협력 환영

전남도가 국립 목포대·순천대와 의과대학 설립에 손을 맞잡았다. 도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공동협력 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나섰다. 그동안 동·서부 간 유지 경쟁이 펼쳐지기도 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에 한 목소리로 절실히 함을 전달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겠다.

국립 의대 신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삼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의 역점 현안 중 하나다. 사회문제인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데다 대규모 석유화학·철강단지 등이 있어 산업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물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도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의료비 역의 유출 심화로 지역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연간 80만명이 타사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그 비용만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전남도는 올해 1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대학 총장, 시장군수, 도·시군 의원, 수도권 향우 회장 등 각계 인사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강력 촉구했다. 이번 선언문에도 의료요건 개선과 당면한 소멸 위기 타개 방안, 국립의대 설립 위한 양 대학 간 역량 집중 및 상호협력 강화, 정원 확대는 의에 의대 신설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2025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대한의사회와 협의체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수도권 출립과 관련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전남도와 지역 양대 국립대학이 의기투합했다. 시의적절하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하루빨리 바로잡고 생명·건강권 확보를 위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차별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협력을 기대한다.

아동인구 급격한 감소 광주·전남 소멸 위험도 높아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광주·전남 아동 인구가 해마다 각각 1만명 정도 줄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광주 아동 인구는 23만3천명으로 6년 전인 2015년 29만2천명에서 20.2%(6만9천명) 급감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30만6천명에서 24만9천명으로 18.6%(5만7천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가구 수는 광주가 17만5천에서 14만3천으로, 전남은 17만6천에서 14만7천으로 줄었다. 인구 비율은 광주가 47.8%로 21%p, 전남은 47.1%로 0.6%p 상승한 반면, 2명 이상은 21%p, 0.6%p씩 감소했다. 양부모 가구 가운데 맞벌이 비율은 광주 72.5%, 전남 67.4%다. 2015년 대비 8.3%p, 9.6%p 증가한 수치다. 외벌이는 광주 26.1%, 전남 23.8%로 각각 7.2%p, 7.9%p 하락했다. 양육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줄었음에도 되레 맞벌이는 크게 늘었다. 상시 근로자 중 남성의 육아 휴직률은 광주 3.5%, 전남 3.4%에 그쳤다. 여성은 18.6%, 16.8%로 5배 격차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아동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8월 처음 작성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양육 환경 변화상을 분석했다.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는 인구와 가구, 기업 등의 통계등록부와 행정자료를 활용한 아동 중심의 모집단 자료다. 아동용 기준으로 부모와 가구원 정보를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가구 구조 및 중요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아동의 급격한 감소는 각급 학교 폐교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 속 서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현금 지원에 집중해 실패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하겠다. 지방의 경우 교육 문제 등으로 역의 유출도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가팔라지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지역사회 또한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난장



김 철 호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나를 기록해주세요’

우보증을 통한 초등학교 입학 지원과 함께 인권변호사를 연계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마침내 지난해 6월 출생신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경제적 여유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인척도 없었던 친모는 일면식도 없던 낯선 사람에게 아동을 맡긴 채 사라져 신고 됐다. 친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자 아동학대사건 담당 검사가 직권으로 아동을 출생신고 했다. 출생신고 직후 친모 또한 좁혀오는 수사망에 걸렸고, 다른 범죄로 인해 수배를 받고 있었던 터라 체포와 함께 구속·수감됐다. 더 놀라운 것은 친모에게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자녀를 출산했다가 유기 및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출생 미신고 시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권리 침해로는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의료서비스 제한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에서 배제가 되며,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불법입양 또는 매매가 용이해 발견이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지난 5년 간 출생 미신고 아동 추정치는 약 3만9천962명으로 매년 약 8천여 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이 태어난 병원이 직접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 통보제’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화답하길라라 하듯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결정을 했고, 윤석열 정부도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3월 정부 주도로 출생신고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 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생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할 것 등을 대한민국에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 도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23년 4월 14일) 결과에서도 설문응답자 총 4천148명 중 87.4%(3천626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가 속속히 통과돼야 한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출생미신고의 사각지대 최소화화를 위한 그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안착되기 위해 의료계, 입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에서 종종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유로 신고된 학대피해아동을 만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금지행위)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방임에 대해 정의하였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작년 4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별거하다가 새로운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례가 있었다. 친모와 내연남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지만 민법 제 844조 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 남편 호적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동의 친모는 가정폭력 피해자였고, 아동을 호적에 등록하면 남편에게 주수치 및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8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을 양육해 왔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은 그 동안 필수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인

불법집회 근절 위해 ‘노란봉투법’ 신중 검토해야

이 소식에 여러 노조 단체들은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사 간에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무책임으로 불법 집회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노조의 불법 집회와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소음, 교통체증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

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엄정 대응’을 외치며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 중이다. 이런 시국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불법 파업과 집회가 더욱 증가할 수 있고, 이를 조장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노동 시장의 건정성 확보와 집회 현장에서 의 폭력행위 등 불법 근절을 위해 노란봉투법은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순승원·광주경찰청 경비과 경비경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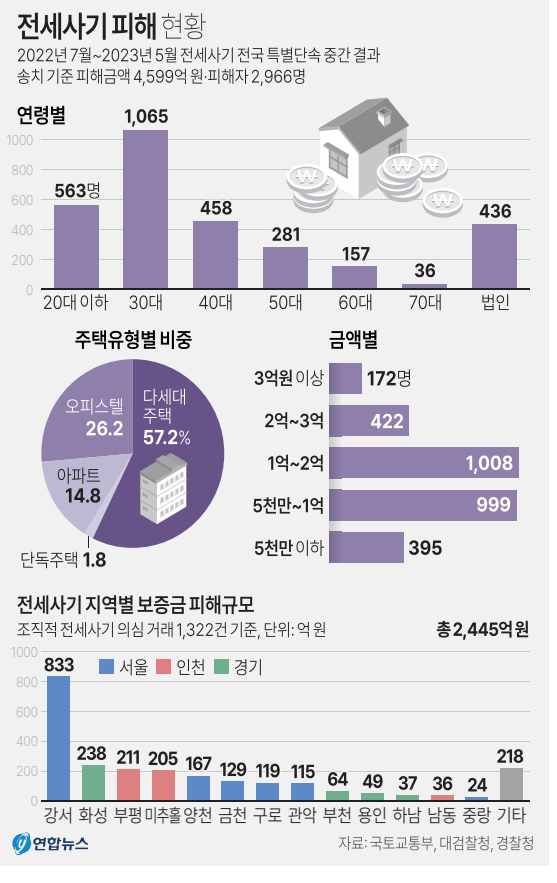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전세사기 수사의뢰 43%가 공인중개사...임대인보다 더 많아

국도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국도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나는 거래 2천91건과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당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도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7%)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업자는 72명(7.4%)이었다. 국도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근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명 ‘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주던 것에서 착안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칭하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제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